


| | | | |
|---|---|------|-------------------------------------|
|  | <h1 style="margin: 0;">보 도 자 료</h1> <p style="margin: 0;">제공일 : 2025년 10월 27일</p> <p style="margin: 0;">붙 임 : 사진 2매, 건의문 1부</p> | 작성과 | 고흥군의회 의회사무과 |
| | | 담당부서 | 과 장 : 정상태 팀 장 : 김도형 담당자 : 김한욱 |
| | | 연락처 | 061)830-6097 |

고흥군의회,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개선 촉구

집행 실적 중심의 졸속행정 탈피...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 필요성 제기

고흥군의회(의장 류제동)는 10월 27일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행정 효율성을 저해하는 신속집행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조영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류제동 의장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건의안에는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가 도입된 지 15년이 지난 현재, 실적 위주의 집행을 경쟁과 무리한 조기 발주로 인한 행정 비효율, 사업 품질 저하 등 부작용이 누적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담겼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도입된 신속집행 제도는 경기 부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연초부터 실적 달성을 위한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공사 품질 저하와 예산 낭비, 공무원 업무 과중 등 지방행정 전반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집행을 중심의 획일적 평가가 지방정부의 재정 운용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고흥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자율성을 침해하는 신속집행 제도 개선 △집행을 위주의 평가 및 불필요한 보고 관행 개선 △사업 품질과 실질적 성과를 고려한 합리적 재정운용체계 확립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조영길 의원은 “신속집행 제도는 금융위기 당시 경기 부양을 위한 불가피한 처방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가로막는 족쇄가 되고 있다” 며 “집행률 위주의 평가에서 벗어나, 사업 품질과 예산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고흥군의회는 이번 건의문을 대통령실,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향후 제도 개선 추진 동향을 주시하며 관련 논의에 지속적인 관심을 이어갈 예정이다.



▲ 조영길 의원이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가결 후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

정부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기 부양을 위해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매년 공공사업비를 조기에 집행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자금을 순환시켜 경기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속집행은 경기침체시기에 자금순환을 촉진하여 일자리 창출 효과를 유도할 수 있으며, 재정사업의 조기발주로 민간소비와 투자심리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지방정부의 재정집행성과를 수치화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일정부분 제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한지 15년이 넘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행정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국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속집행 제도를 시행해 온 결과 성과 중심의 단기 집행 압박으로 인한 사업의 품질저하와 부실공사 우려가 증가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행정절차 미비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달성을 위한 무리한 발주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초 조기발주로 인한 하도급 단가상승과 예산 낭비 등 시장왜곡 효과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집행을 중심의 평가로 인해 실질적 성과보다는 형식적 수치경쟁으로 제도가 변질되어, 지자체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기보다 사업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놓쳐가며 단기 집행에 쫓기는 졸속행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단순 집행률 중심의 제도는 사업의 완성도와 성과를 평가하는 질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지역여건, 공사 특성 등을 반영하여 집행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자율권을 확대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실질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할 것입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한 처방이었던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는 오늘날 지방정부의 효율적 재정운영을 제약하는 족쇄로 작용하게 되어, 자치단체간 무용한 실적경쟁과 과도한 업무부담을 유발하고, 공무원들의 효율적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결과, 그 폐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고흥군의회는 지역특성과 행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중앙정부의 획일적 제도가 지방재정 운영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을 깊이 우려하며, 다음과 같이 신속집행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자율권을 침해하는 신속집행 의무 조항을 폐지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라!

하나, 실적 경쟁을 지양하고 불필요한 보고를 폐지하여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행정 환경을 조성하라!

하나, 지방재정 운영의 실질적 자율성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할 행정·재정적 기반을 확립하라!

2025년 10월 27일

고 흥 군 의 회